

에너지단신

한국가스공사, 러시아 가스관 서해노선 확장

이르면 2008년부터 국내 공급

2008년부터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가 서해 해저 가스관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 컨소시엄은 14일 오후 모스크바에서 3년간에 걸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보고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가스공사 오강현 사장과 러시아석유(RP), 중국국영석유사(CNPC) 대표가 참석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가스관을 북한으로 연결하는 것은 서해 해저로 연결하는 것에 비해 45% 정도 건설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이 채택한 서해 해저 노선은 이르쿠츠크-선양-다렌-서해-평택으로 이어지며 총 연장은 4천2백38km로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

전체 사업비는 1백76억달러(약 21조 원)에 달해 당초 예상(1백20억달러)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백11억5천만달러는 가스관 연결에 들어가고 64억5천만달러는 가스전 개발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판매자인 러시아 측이 가스의 공급 가격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야전력 가격 2배 인상해야”

30kW 전력계약, 76%필요이상 계약, 가격 현실화·설치시 허가제 도입

현재 심야전력 가격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열린 ‘경기도 에너지워크숍’에서 경기도에너지시민연대 박은호 사무국장은 “심야전력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수요량의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대 신규수요 당시의 절반정도는 유지하고 있고 일반전력수요 증가율보다 높다”며 “아직까지 심야전력 신규수요의 주원인은 일반전기요금의 1/4 정도의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심야전력에서는 증가수요만 있어 심야전력 총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사비 면제의 마지막 시한이었던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신규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심야전력 기기 설치보조금 지급 직전시기인 2000년에 신규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박 사무국장은 “심야전기 계약 전력의 76.3%가 필요이상의 전력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30kW를 심야 전기로 계약, 사용할 경우 35.8명이 적정면적으로 업계와 관련학계에서 보고 있으나 33명이하 면적에서 30kW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의 76.3%로 필요이상의 전력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사무국장은 심야전력 수요 억제에 대해 심야전력 설치기준 강화, 심화전력 수요의 관리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심야전력 이용가능지역을 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 이용조건이 어려운 곳, 가령 일반지역보다 추가요금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정해 심야전력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심야전력 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야전력 사용총량제를 도입, 적용할 것과 심야전력 설치시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초기 심야전력 수요의 최대 유인동기는 심야전력 가격이었으나 폭발적인 증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설치보조금 중지와 설치최대용량의 제한 등의 조치는 심야전력 수요의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의 심야전력 가격을 2배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심야전력의 본래 취지인 피크사용 시간대 분산의 원칙을 위해 여름철 빙축냉방 수요의 창출과 수요량 관리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가스산업신문>

LPG 특소세 폐지 불투명

세수감소 우려한 재경부 반대 부딪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백승홍 의원이 발의하고 35인이 동의한 프로판 특소세 폐지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이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환경오염·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교통세적 성격이 강하며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 도입 가격의 격차보다는 유통비용상 차이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가격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판과 도시가스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LPG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과세형평이 저해되며 2000년 12월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부탄,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했지만 프로판은 서

새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 - PRES

- 손으로 반죽하여 붙여만 준다.**
배관보수 접착제
▷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루미늄용, 폴리설텍용, 수중용, 콘크리트용, 나무용
- 이액형 보수제** ▷ 주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격의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 / ALUMINUM / STAINLESS 등
- 수처리 케미칼** ▷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미생물제어제, 세관제, 편균일체척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사용방법

1. 벨트를 잠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제어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 2 압력이 제거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3. 보수테이프를 물에 3-5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감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

에너지산업

민취사용 연료라는 점을 감안해 LNG와 동일하게 최소한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수세 폐지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법관계법은 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괄처리하기로 당정간 합의를 한 바 있지만 10일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백승홍 의원이 발의한 프로판 특수세 폐지안은 재경위 상임위에 회부돼 있으나 130여개 관련법안을 다뤄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처리여부를 접치기는 아직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재경부의 반대가 부딪쳐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산업신문>

국제유가 급등세로 반전

과잉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혼조세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나타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84달러 상승한 27.04달러를 기록, 지난달 29일 27.23달러 이후 9일 만에 27달러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날 1.55달러의 급등세를 보였던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01달러 내린 30.29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28.36달러로 0.02달러 오르는데 그쳤다.

뉴욕선물시장(NYMEX)의 WTI유가(12월분)와 런던선물시장(IPE)의 브렌트유도 0.04달러, 0.19달러 떨어진 30.26달러, 28.41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전날 예상치 못한 미국의 석유제품 재고 감소 소식에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던 국제유가는 과잉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내년도 에너지 특별회계 2조 2,111억원 책정

석유·가스 안정공급기반 구축은 6,461억원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보다 75% 감소한 2조 2,11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예산심의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자부가 제출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004년 예산은 총 2

조 2,111억원으로 지난해 2조 3,896억원 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발전가능에너지시스템 구축에 6,968억원, 석유·가스안정공급기반 구축에 6,461억원, 석탄산업합리화에 4,477억원, 일반광업자원개발 등에 1,641억원, 정부내부지출 등에 2,56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지원 확대에 1,987억원,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추진에 484억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에 4,49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의 경우 석유비축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2,228억원, 2010년 자주개발 원유 10% 확보 목표달성을 위한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지속 추진에 2,558억원, 천연가스 공급기반 구축 등 석유·가스 공급시설 확충지원에 900억원, 석유·가스의 품질관리비 지원에 56억원, 가스의 공급·사용상의 안전관리 지속 지원에 719억원이 배정됐다.

<가스산업신문>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킵 오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산업계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CO2 등)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일정량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허동수 LG칼텍스정유회장)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앞으로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가상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킵오프 미팅을 6일 개최, 배출권거래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배출권 모의거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 부과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기업들이 사전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 3월까지 2-3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모의거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미 구축한 배출권 등기거래시스템과 현재 마련중인 운영방안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6개 회원사와 주요 발전사가 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

자의 실정에 맞는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경련은 모의거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참여 기업들이 비용효과적인 거래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역시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출권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

동절기 LPG수요 417만톤 전망

"재고 충분해 수급상 장애 없을 듯"

올해 동절기동안 LPG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 LPG 수급전선에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 LPG 수입기지 준공 이후 충분한 재고확보로 인해 34일분의 물량 저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동절기 LPG공급이 수요보다 8만톤 상회함에 따라 LPG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산자부는 월동기 LPG수급계획을 통해 올해 동절기동안 공급 가능한 LPG는 425만 7,000톤이며 수요는 417만 7,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형별 공급량은 프로판 209만 7,000톤, 부탄 216만톤인데 수요는 204만 3,000톤과 213만 6,000톤으로 겹쳐져 각각 5만 4,000톤, 2만 6,000톤 등 총 8만톤의 여유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월말 현재 LPG 재고량이 94만 2,000톤(석유공사 30만톤, LG가스 32만톤, SK가스 32만 2,000톤)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한 폭설 등 일시적 이상기후로 인해 내륙수송 장애요인으로 부분적인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추가 없어도 전력수급 이상 無

"녹색전력연구회, 12일 정책 발표회서"

핵·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없어도 국내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녹색전력연구회는 12일 '한국의 전력정책 대안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2015 녹색전력정책 발표회'를 갖고 지난 3월부터 전력 효율화분야와 재생가능 에너지분야 및 총괄분야 등 세 분야를 연구한 끝에 도출된 결과로 이갈

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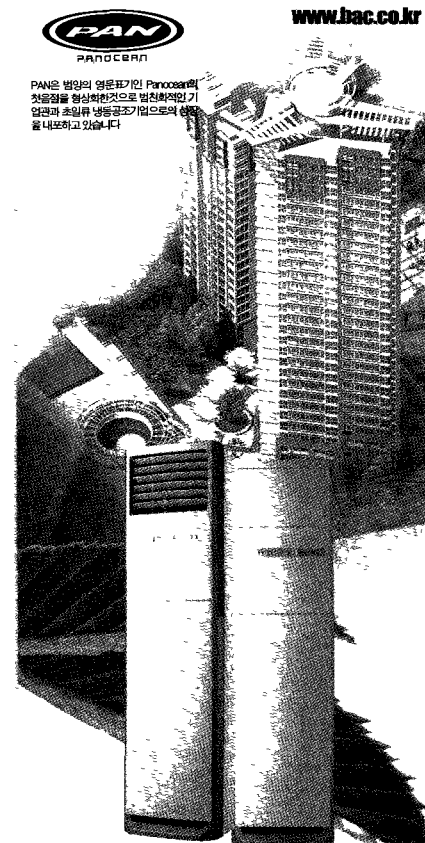
이날 발표회에서 이미 개발된 국내 절전 기술 도입과 설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추진한다면 2010년까지 최대 수요는 5,176만kW에 머무르게 되고 2003년 말 기준 발전설비용량은 5,471만kW에 달해 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녹색전력연구회는 효율화 정책만으로도 추가 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이 되면 정부의 소극적 수요관리에 의해 전력수요와 1,369만 kW만큼 차이가 발생, 핵발전소 14개 분량을 절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데이터는 정부자료와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에 근거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녹색전력계획에 의한 수요절감 데이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전기기와 전동기 등에 적용하고 있는 절전 기술에 의한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산업회보 광고문의 T.2679-6343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냉동공조시스템의 솔루션 -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고객상담실: (02)401-4321, (02)761-7631 콜로버서비스: 080-022-8815-6